새로운 자본주의 연구모임 정기 세미나

트럼프 2기 통상정책: 동향 및 전망

이시욱

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

2025년 4월 16일

차례

1. 최근 통상환경 상의 메가트렌드

2. 역사적 맥락에서 본 트럼프 2기 통상정책

3. 트럼프 2기 통상정책: 배경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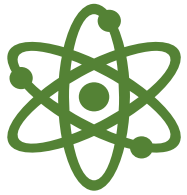
4. 도전요인과 시사점

1. 최근 통상환경 상의 메가트렌드

국제통상환경 상의 5대 megatren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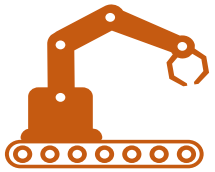
기술 대전환

- Industry 4.0
- 디지털 대전환
- 기술의 융복합화
- 기술 승자와 패자 간 격차 확대



에너지 대전환

-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대응
- 친환경기술 발전
- “Climate Hoax”?



산업 대전환

- GPT기반 산업혁명
- 제조업의 서비스화
- 산업 전환에 있어 데이터 및 내수시장 중요성 확대

인구구조 대전환

-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·인력부족 문제
- 인구 PIN code 변화 (1-1-1-4 → 1-1-4-5)
- 이민 유치 경쟁
- 사회·환경적 가치 등 소비자 선호 변화

통상 패러다임 대전환

- 미·중 패권경쟁
- 보호무역주의 확산
- 경제안보 중시
- 가치보다는 이익 우선
- Friendshoring, Nearshoring → Onshoring

역사적 순환성? "History doesn't repeat itself, but it often rhymes (Mark Twain)"

✓ **현 상황은 1차 세계화 종료시점인 1910년대와 유사**

- 유사점: 신기술 및 에너지 전환, 신흥 패권국 출현, 다자질서 약화, 보호무역주의 확산, 반이민 정서, 안보 우려 고조 등
- 차이점: GVC 기반 국가 간 초연결성, 디지털 전환, 경제의 서비스화, 달러 기축통화, 고령화 진전 등

1차 세계화 (19세기 중반-1914)

- 증기 · 교통기술 → 내연기관의 발전
-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원 전환
- 농업사회 → **제조업 전환**
- 금본위제 하 **고정환율제**
- **상품 위주의 국제거래**
- 후발국 간 **산업화 격차 확대**
-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
- **경제패권 경쟁**: 영국 vs 기타 유럽, 미국

2차 세계화 (20세기 중반-현재)

- 운송 · 통신기술 → AI기술의 발전
- 석유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
- 제조업 중심 → **서비스화**
- 달러화 중심의 **변동환율제**
- 자본 및 **기술지식의 국제거래 대폭 확대**
- 선진국 간 빠른 소득수렴과 **후발국 추격**
- 고령화에 대한 우려
- **경재패권 경쟁**: 미국 vs 일본, 중국

패러다임 대변혁기의 생존전략: “Thrive, don’t just survive!”

✓ 초불확실성 하 대변혁기에는 다양한 리스크·도전과제가 산재하나, 새로운 혁신 유인도 대폭 확대

- 신기술의 적극적 수용, 초격차 기술 확보,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등을 통해 패러다임 대변혁기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 가의 여부가 국가나 기업의 중장기 성패를 결정

산업화 수준 국제비교(영국, 1900년 = 100)

	1800년	1830년	1860년	1880년	1900년	1913년
영국	16	25	64	87	100	**115**
독일	8	9	15	25	52	**85**
프랑스	9	12	20	28	39	59
이태리	8	8	10	12	17	26
미국	9	14	21	38	69	**126**
일본	7	8	7	9	12	20
중국	6	6	4	4	3	**3**
인도	6	6	7	9	12	**20**

Source: Bairoch (1982)

2. 역사적 관점에서 본 트럼프 2기 통상정책

트럼프 2기 핵심 정책: 경제 분야

✓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**①포괄적 감세, ②규제완화, ③보호무역주의, ④에너지 독립성 강화, ⑤ 이민 제한** 등을 통한 제조업 부흥,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에 초점

-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 추진
- 법인세율 인하
- 팁 면세

-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
-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을 통한 방만 지출 삭감

- 화석연료 채굴 규제 완화
- 에너지 독립 및 지배권 확보
- 파리협정 탈퇴

- 미국 예외주의
- 무역불균형 해소
- Reshoring 기반 제조업 부흥
- 대외 재정수입 증대

- 불법이민 중단 및 추방
- 국경통제 강화
- 비자심사 강화 및 제한적 비자 정책

역사적 관점에서 본 트럼프 2기 경제정책기조

✓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은 **감세·규제완화**를 강조한 제40대 레이건 대통령과 **고율관세·이민 제한**을 강력 추진한 25대 맥킨리 대통령 간의 정책 조합

Roland Reagan
(40th US President, 1981-89)

- 대규모 감세
-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
- “힘에 의한 평화 "

+

William McKinley
(25th US President, 1897-01)

- 고율의 관세정책
- 이민 제한
- 팽창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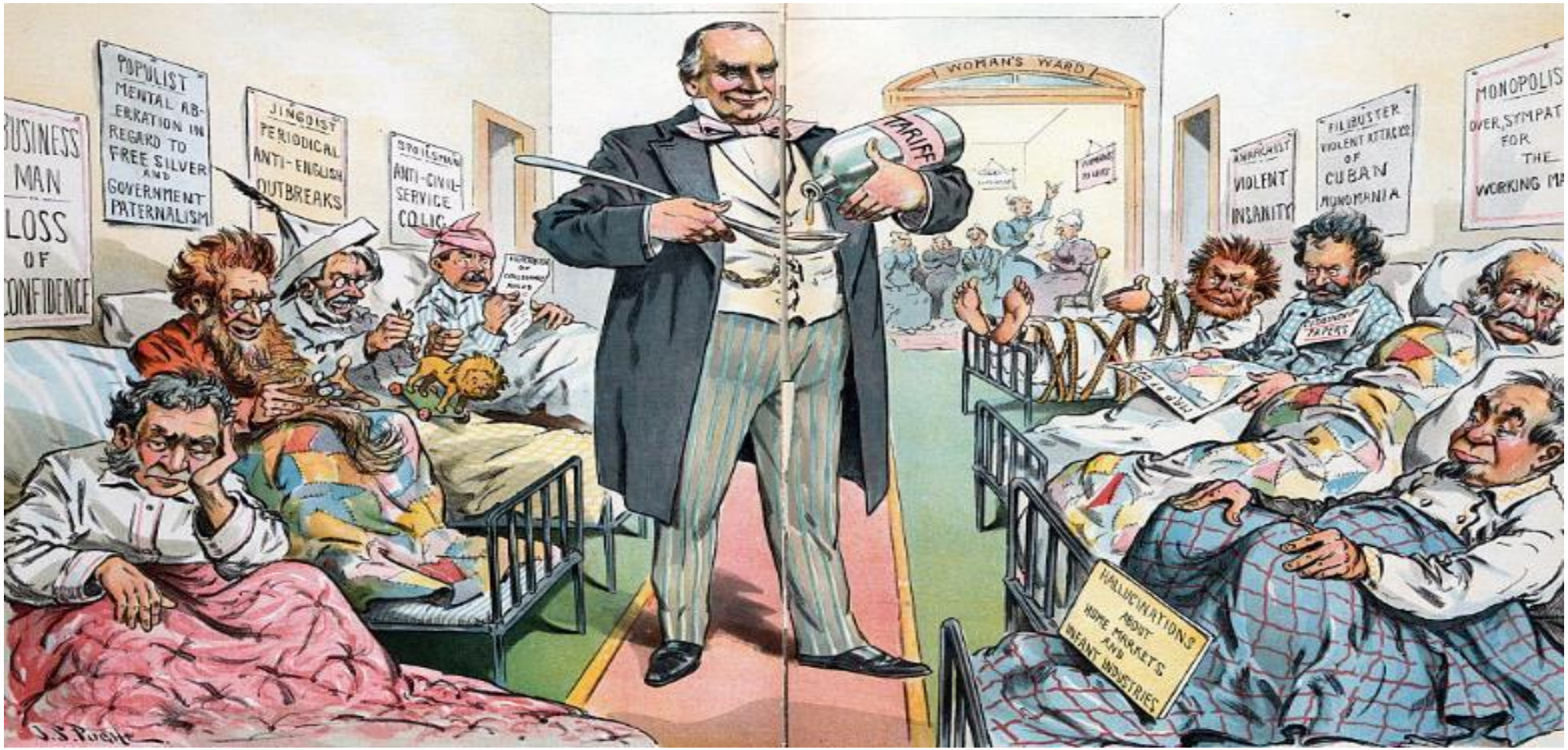
=

“트럼피즘”

트럼프의 롤모델: 윌리엄 매킨리 William McKinley

- ✓ 미국 25대 대통령(1897-1901)
  - 전임 Grover Cleveland, 후임 Theodore Roosevelt
- ✓ Napoleon of Protection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
  - 하원 세입위원장 시절(1890) 관세율 38%에서 49.5%로 높이는 "맥킨리관세법" 주도
  - 대통령 1기 때도 미국 노동자 보호 명목으로 고율 관세부과, 이민제한 등 추진
  - 제국주의적 팽창: 미-스페인 전쟁(푸에토리코, 괌, 필리핀 할양), 하와이 병합 등
  - 매킨리 재임을 시작으로 36년 간은 공화당 전성시대(우드로우 윌슨 1913-21 제외)이자 미국 경제의 Golden Age!
- ✓ 트럼프의 평가
  - "맥킨리는 Tariff King으로 미국 역사 상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 (24.7, 블룸버그 인터뷰)"
  - "맥킨리는 관세와 재능으로 미국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다. 타고난 사업가였고 파나마 운하 (건설) 등 루스벨트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했다" (25.1.20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)

트럼프의 롤모델: 윌리엄 매킨리 William McKinle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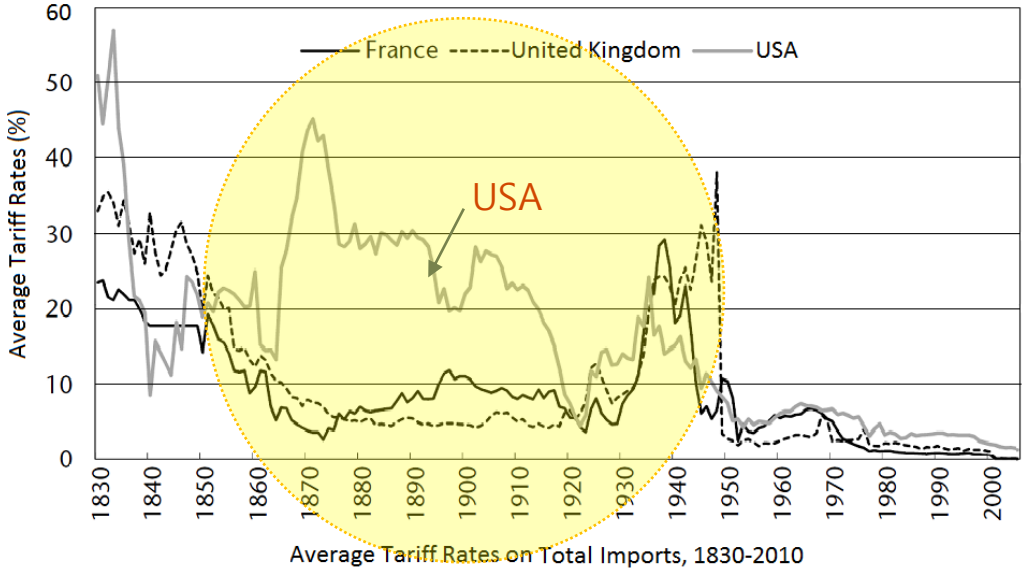


"He has one medicine for all ills: President McKinley as a physician dispensing strong "Tariff" medicine".

미국 관세의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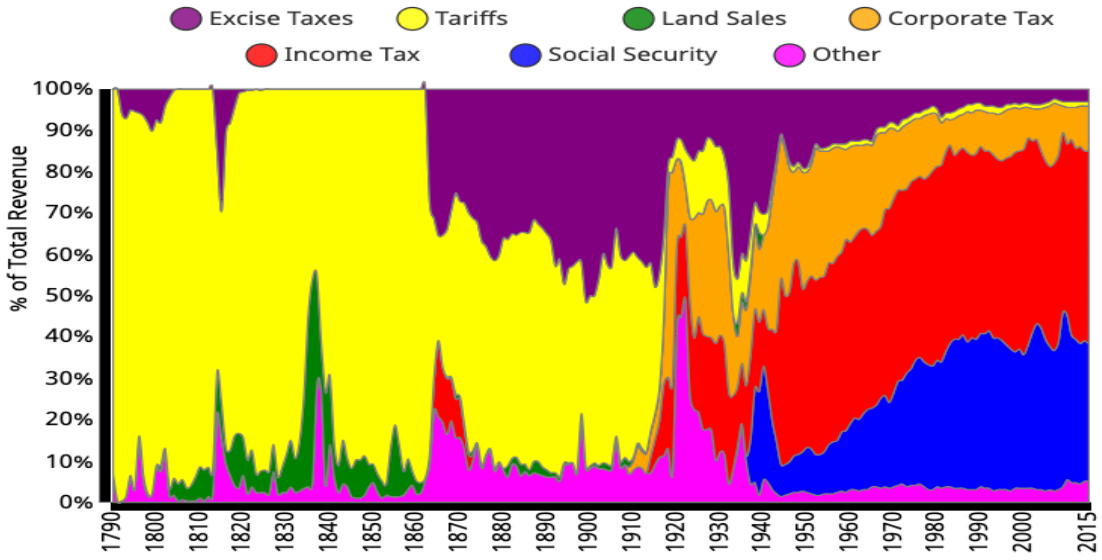
- ✓ "The mother country and bastion of modern protectionism" (Bairoch, 1993)"
  - 유치산업 육성(18~19세기) → 노동자 및 농민 보호 (19세기말~20세기 초) → 상호주의 적용(1934 ~)
  -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체제 대 영국의 자유무역주의 체제
- ✓ 1913년 연방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관세수입은 미 정부재정의 50~90%를 차지
  - 미국 관세정책 3대 목표: 정부 재정수입 (Revenue), 수입제한 (Restriction), 상호주의 (Reciprocity)

평균 관세율 추이



Sources: Imlah, Economic Elements

미 연방정부 재정수입 원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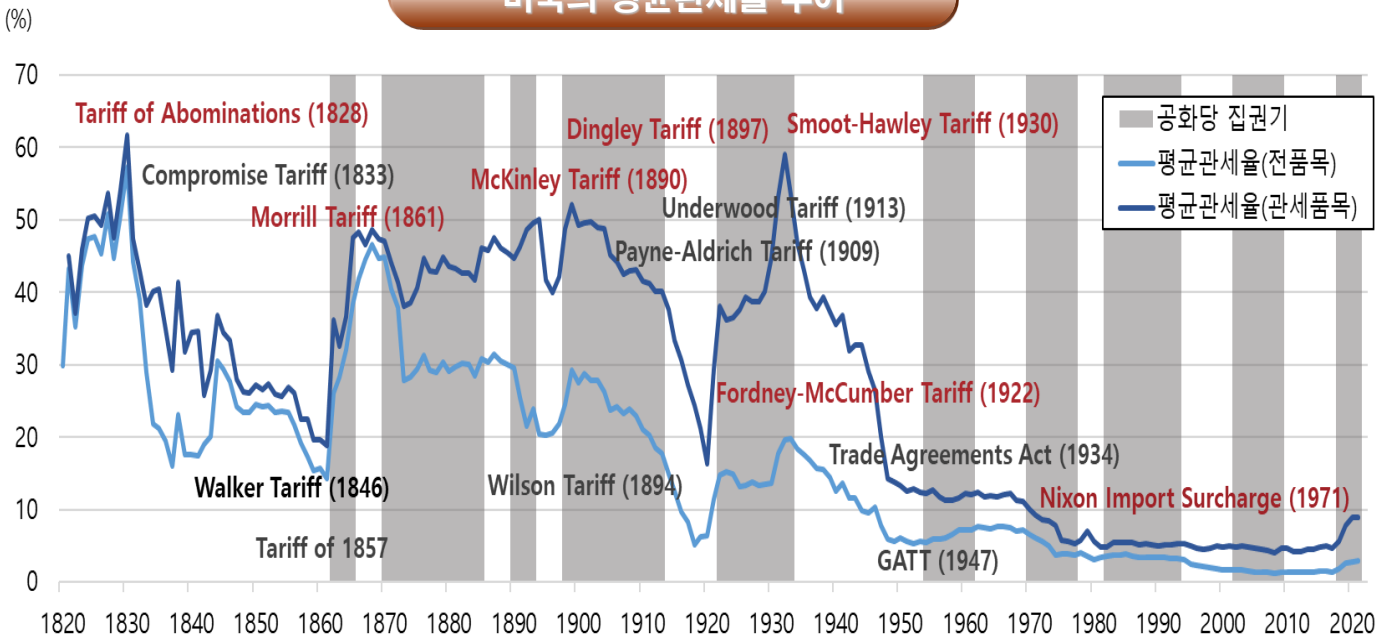


[참고]1930년 Smoot-Hawley Tariff Act

✓ 동 법을 통해 관세율을 평균 40%에서 60%로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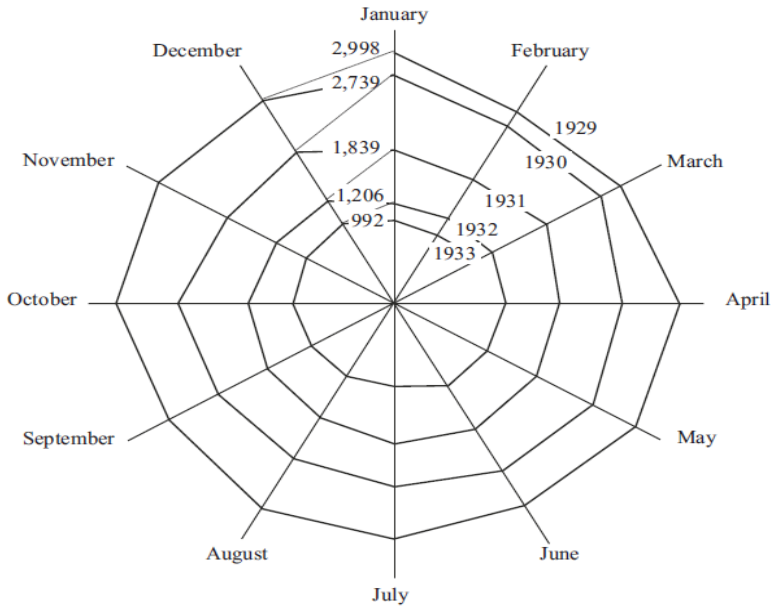
- 동 법은 당초 대공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, 동 법 시행 이후 주요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의 농업수출은 2/3가 축소 (전세계 무역과 미국의 무역은 각각 2/3과 절반 이하 축소)
- 19~20세 초반 공화당 정부에서 주로 고율의 관세제도 시행

미국의 평균관세율 추이



주: 1) 총수입금액 대비 관세수입 비중. 2) 음영은 공화당 집권기.
자료: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, Table Ee429; USITC.

Trade Collapse: 1929~33 (백만불)



자료: Mussa(2000)

3. 트럼프 2기 통상정책: 배경 및 전망

미국 무역적자 원인을 보는 시각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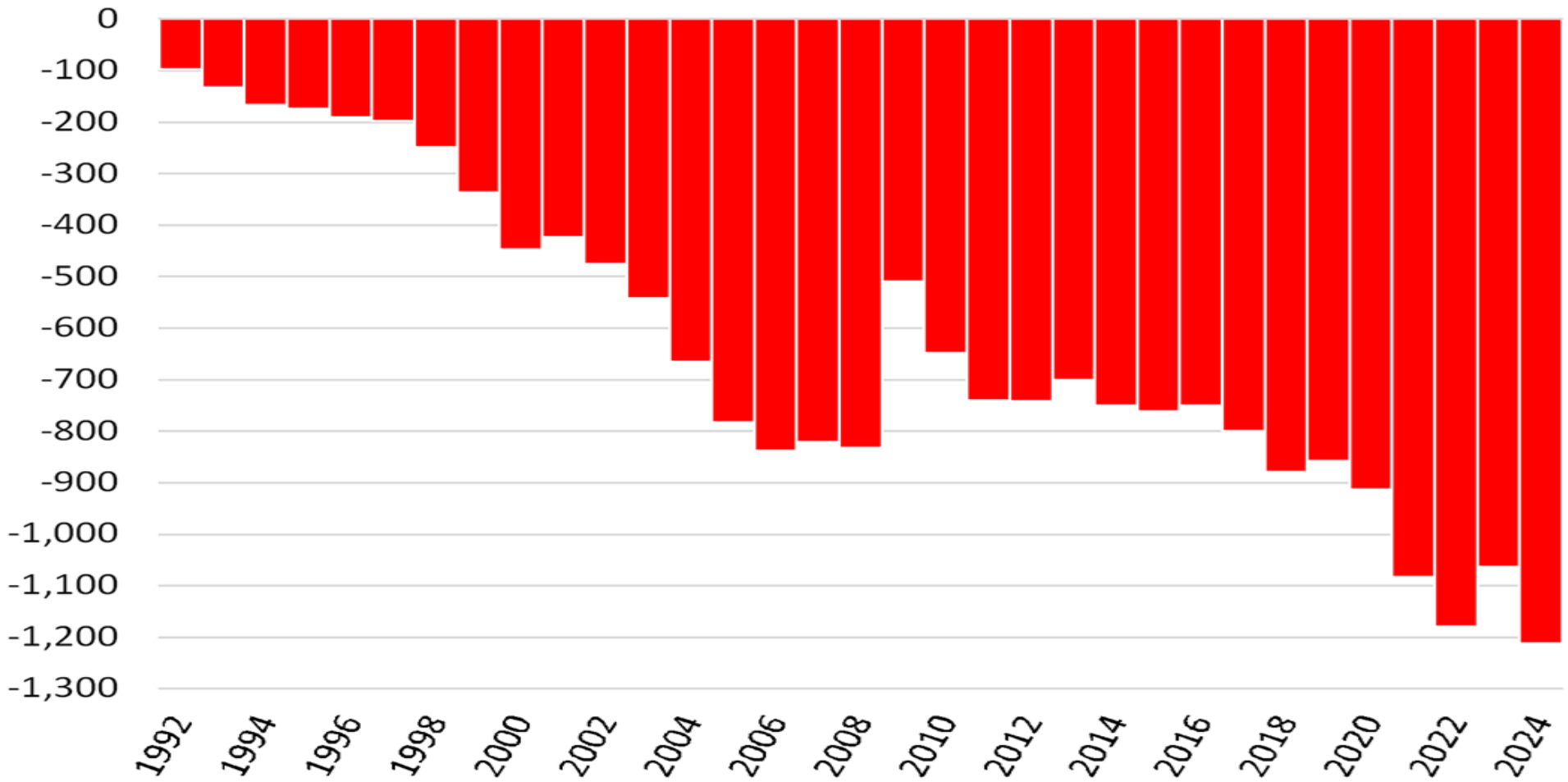
✓ **일반적 관점**

-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**국내 저축 대비 과다한 국내소비**에 기인
- 경상수지(무역수지) =[국내민간저축(S) - 국내민간투자(I)] + [공공재정수입(T) – 공공재정지출(G)]
- 아울러, 양자 간 무역수지는 **비교우위**에 의해 결정

✓ **트럼프 2기 정부의 관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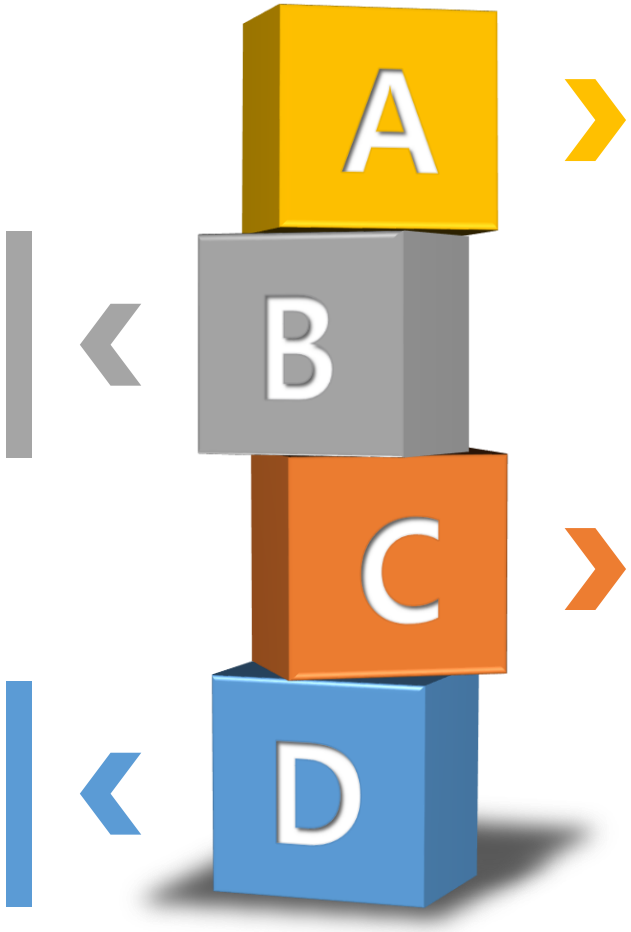
-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상대국의 지나친 보조금, 환율조작, 덤핑 등의 **불공정 무역관행**과 USMCA와 같은 **잘못된 무역협정**("horrible trade deals")에 기인
- 한편, EU, 한국 등 **주요국들이 충분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아** 미국의 관련 재정지출이 불합리하게 큰 수준인 바, 이 또한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귀결
- 아울러, 국제경제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**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과도한 평가절상**이 지속되어 미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쇠락을 초래

[참고] 미국 무역적자 추이 (상품, 10억불)



자료: 미국 Census Bureau

트럼프 2기 산업통상정책의 목표



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

- 온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기반 육성
- 대중 디커플링을 통한 경제·기술 패권 유지
- 인력 부족 문제?

재정수입 확대

- 포괄적 감세에 대응, 관세로 재정수입 증대
- 관세로 소득세 대체 가능?

달러화 패권 유지

-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공고화
- 달러화 패권과 수출경쟁력 간의 상충성?

무역 불균형 해소

- 불공정 무역관행
- 관세, 물가, 환율 간의 상충성?

왜 하필 관세인가?

"Tariff is the fourth most beautiful word after God, love and religion!"

- 감세 등 재정지출 확대에 대응한 재정수입 확보수단

- 무역불균형 해소
- 중국 등 불공정 무역관행 교정
- 제조업 일자리 회복 (니어쇼링, 프렌트쇼링 → 온쇼링)

- 반세계화, 반중국 정서를 가진 유권자의 표심 확보
- 관세는 유권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책조치

트럼프 2기 관세조치 (25.4.8 현재)

	내용
펜타닐, 국경보안 관세	· 펜타닐 유입·국경 보안을 이유로 「국제긴급경제권법(IEEPA)」을 발동해 멕시코, 캐나다 25%, 중국 10%(+10%) 관세부과를 3월 4일 시작 (USMCA 적용 품목 대상은 관세 면제)
제232조 관세	·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25% 관세부과 (3월 12일 발효) · 자동차에 대한 25% 관세는 4월 2일 발효되었고, 관련 부품은 5월 3일 이전 부과 계획
상호관세	· 무역적자 지속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「IEEPA」를 발동해 국가별 10~50% 수준의 관세 부과 (10% 기본관세는 4월 5일 기발효,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분은 4월 9일 시행 예정이었으나, 90일 유예된 상황) · 스마트폰, 일부 컴퓨터·전자제품 관세 면제 (4월 11일)
기타	· 반도체, 의약품, 목재, 구리 등 추가로 관세가 필요한 분야 검토 중

[참고] 美 행정명령에 활용 가능한 무역법령

		발동 요건	주요 조치	조사	기간/상한
1962년 무역확장법	232조	특정품목 안보위협	- 수입물량 조절	상무부	
1974년 무역법	301조	불공정 무역관행 (특정 분야/품목)	- 양허혜택 정지·철회 - 관세 및 수입제한 등	대통령 (USTR)	
	310조 (슈퍼 301조) 182조 (스페셜 301조)	불공정 무역관행 (포괄)	- 시장접근 양허 정지·철회	대통령 (USTR)	
	201조 (글로벌 SG)	심각한 수입증가/산업피해	- 관세 또는 수입 쿼터	ITC	1년(최대+3년)
	122조	무역수지 적자, 달러 가치하락 등	- 관세 또는 수입 쿼터	대통령	최장 150일 최고 15%
	402조	비시장경제국의 이민 자유억압 등	- 정상무역관계지위 유예·철회	대통령	
1930년 관세법	338조	미국상업(상품) 활동차별	- 관세 및 수입금지	대통령	최고 50%
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		**국가비상사태 선언**	**- 광범위한 경제거래 규제**	**대통령**	

[참고] 국제긴급권한법 (IEEPA)

- ✓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: IEEPA)은 비전시 상황 시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(National Emergency Act의 산하 법령)
  - 전시에는 1917년 적대국거래법(Trading with the Enemy Act: TWEA) 적용
  -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별도의 의회절차 없이 다양한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
- ✓ 1977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24년 초까지 69건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, 현재 39건(바이든 대통령의 2건 포함)이 발효 중
  - 초국가적 범죄, 사이버 지원 활동, 인권 침해 및 부패, ,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이란, 베네수엘라, 북한 등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어 왔으며,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사용된 사례 없음
  -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적대국거래법(TWEA)에 의거하여 모든 수입품에 10% 관세 부과 후 철회
- ✓ 동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" 국가 비상사태 " 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 부재
  - 의회는 대통령이 선포한 '국가 비상사태'를 철회할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, 법원이 대통령의 '국가비상사태'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희박

상호관세

✓ 상호관세 Formula

$$\Delta\tau_i = \frac{X_i - M_i}{\epsilon * \varphi * M_i}$$

- ε(수입가격 탄력성) = 4, φ(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) = 0.25 로 가정 → 양자 간 무역수지/수입액 = 추가 관세율?
- 국가별로 10~50% 추가관세 부과 (중국 34%, 대만 32%, 한국 25%, 일본 24%, EU 20%, etc)
- 미국기업을 고려하여 USMCA 규정 충족 시 관세부과 유예 (USMCA 활용률은 대략 80% 수준)

✓ 문제점

-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한 기존 양자간 관세율 격차, 비관세 장벽, 부가가치세 수준 등과는 무관한 산식
- 순저축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는 단순히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전환만 초래하는 두더지 잡기(whack-a-mole) 게임에 불과 (Maurice Obstfeld, 25.4.4)
- φ는 소매가격 기준(0.25)이 아닌 수입가격 기준(0.945)이 되어야 함 (America Enterprise Institute, 25.4.4)
- 관세부과로 달러화가 절상되는 경우 관세수입만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커질 가능성 ("Currency Offset")

[참고] 상호관세 도출 산식

✓ 수입수요(M)에 대한 수입가격(p) 탄력성

$$\varepsilon = -\frac{\Delta M/M}{\Delta p/p} \quad \Leftrightarrow \quad \frac{\Delta p}{p} = -\frac{\Delta M}{\varepsilon * M}$$

✓ 관세 조정(τ)에 따른 수입가격 변화율을 전가율(pass-through, φ)로 정의

$$\varphi = \frac{\Delta p/p}{\Delta \tau} \quad \Leftrightarrow \quad \Delta \tau = \frac{1}{\varphi}\frac{\Delta p}{p}$$

✓ **수입수요 변화의 목표치를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 설정:** $\Delta M = (M - X)$로 정의하면, 탄력성과 전가율 정의로부터 상호관세 공식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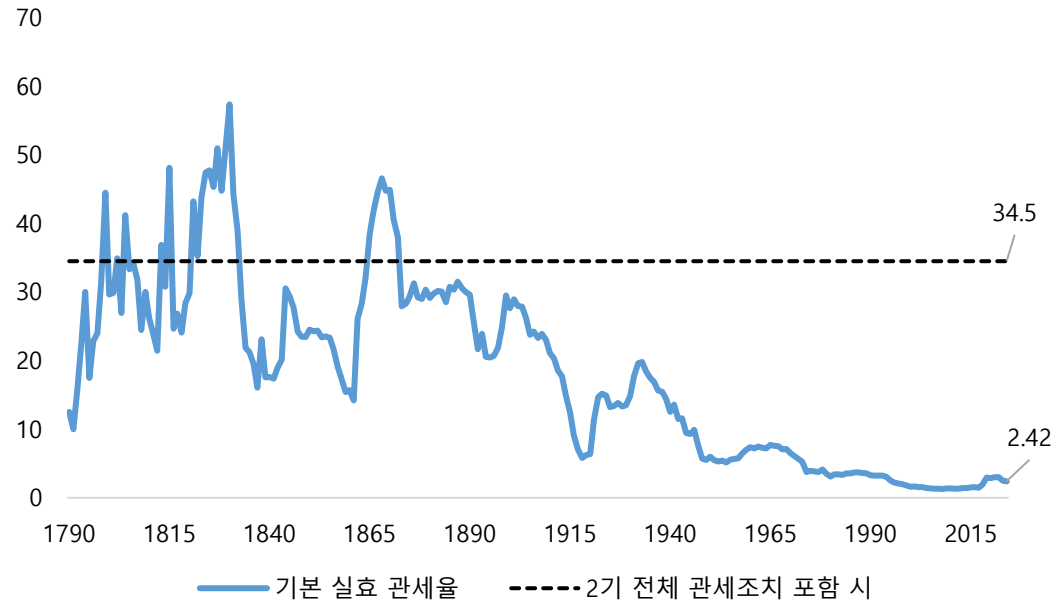
$$\Delta \tau = -\frac{\Delta M}{\epsilon * \varphi * M} = \frac{X - M}{\epsilon * \varphi * M}$$

트럼프 2기 관세조치 (25.4.10 현재)

✓ 현재까지의 관세조치들을 적용하면,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872년(38.0%) 이래 가장 높은 34.5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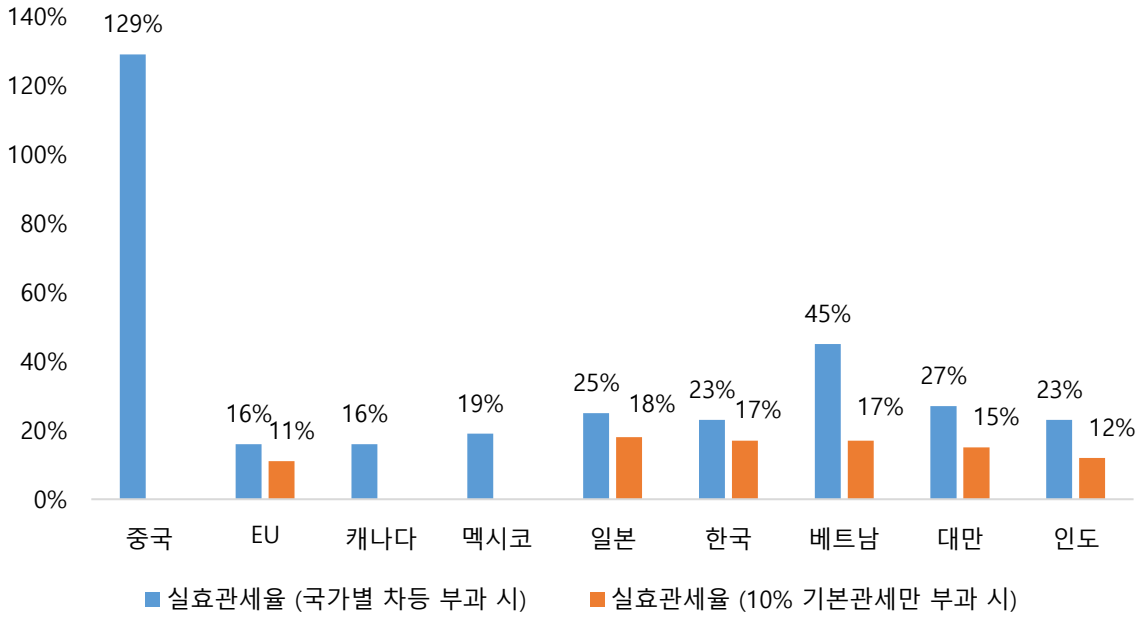
- 주요국별로는 중국 129%, EU 16%, 일본 25%, 한국 23%, 베트남 45% 등임.

미국의 실효관세율 추이 (%)



자료: 예일대 예산연구소 &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

관세조치 후 국가별 실효 관세율 (%)



자료: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 (25.4.11)

[참고] 트럼프 2기 이전의 주요국 산업별 대미 실효관세율[1)]

산업	중국	EU	인도	일본	대만	베트남	한국
농림수산업	3.23 (△13.01)	0.20 (△0.33)	9.04 (8.72)	0.34 (△0.22)	1.15 (0.66)	1.13 (1.09)	81.43 (81.38)[2)]
채취업	2.23 (△ 1.81)	0.00 (△0.03)	1.92 (1.29)	0.00 (0.00)	0.00 (△0.01)	2.05 (2.02)	0.00 (0.00)
음식료업	10.84 (△8.20)	5.25 (3.83)	15.51 (15.11)	6.89 (6.22)	10.32 (9.24)	1.90 (1.59)	0.59 (0.58)
섬유/섬유제품	6.39 (△12.06)	6.27 (△2.49)	10.18 (0.79)	4.32 (△1.49)	3.20 (△4.46)	9.18 (△7.95)	0.00 (△0.30)
가죽/가죽제품	6.73 (△17.97)	3.41 (△6.10)	13.95 (6.00)	26.93 (15.85)	3.13 (△7.61)	4.42 (△5.45)	0.00 (△0.05)
목재품	0.26 (△18.80)	0.37 (△0.35)	8.67 (5.44)	0.17 (△1.25)	0.01 (△3.88)	0.06 (△3.13)	0.00 (0.00)
종이/인쇄	1.21 (△ 13.10)	0.03 (0.01)	4.19 (4.19)	0.00 (△0.01)	0.02 (0.02)	1.48 (1.48)	0.00 (0.00)
석유정제품	4.67 (△3.53)	0.23 (△3.59)	9.58 (9.58)	0.01 (0.01)	0.27 (0.27)	3.48 (3.48)	0.00 (0.00)
화학	4.34 (△6.59)	1.72 (0.50)	7.97 (6.23)	0.65 (△0.57)	1.93 (△0.90)	1.64 (△3.12)	0.00 (△0.03)
고무/플라스틱	7.66 (△9.03)	5.32 (1.41)	11.65 (8.74)	2.97 (△0.81)	5.08 (1.26)	9.69 (5.55)	0.00 (0.00)
비금속 광물	10.76 (△9.64)	2.76 (△1.38)	9.26 (7.40)	0.38 (△1.65)	6.13 (3.46)	9.46 (7.67)	0.00 (0.00)
1차금속/금속가공	4.02 (△14.76)	1.49 (0.12)	7.03 (5.25)	1.13 (△1.00)	1.09 (△1.82)	2.30 (0.36)	0.00 (△0.01)
기계	3.52 (△17.87)	1.34 (0.37)	7.66 (6.59)	0.00 (△0.81)	0.54 (△1.26)	1.75 (0.95)	0.00 (0.00)
전기/광학기기	0.99 (△7.88)	0.53 (△0.42)	7.86 (7.15)	0.00 (△1.18)	0.28 (0.07)	0.39 (0.03)	0.00 (0.00)
운송장비	7.99 (△15.94)	2.88 (0.91)	10.85 (9.19)	0.00 (△2.32)	4.02 (1.01)	11.43 (8.82)	0.00 (△0.01)
기타 제조업	4.07 (△5.32)	0.32 (△0.38)	10.09 (8.85)	0.91 (0.14)	0.27 (△1.21)	2.76 (2.53)	0.00 (0.00)

주: 1) 괄호 내는 각국 대미 관세율과 미국 관세율 간 격차; 종가세 대상품목 기준; 관세율은 2022년, 수입액은 2022~23년 평균값 적용
2)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율은 높으나,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두는 무관세쿼터(TRQ) 적용 중

관세부과의 효과 ①: 무역불균형 완화 vs 달러화 패권

✓ 관세에 따른 물가인상, 달러화 강세 등으로 美 무역적자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

- 관세인상은 ①수입 수요 감소 → 상대국 환율 절하/달러화 절상, ②물가인상 → 이자율 인하 지연 → 달러화 강세 지속, ③통상 불확실성 증대 →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 증가
- 다만, 관세인상 여파로 미 국채 매도, 안전자산으로의 달러화 위상 약화 등으로 달러화 약세 진행
- 경상수지는 순저축에 의해 결정되는데,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적자 축소 난망

✓ 무역불균형이 가시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필요

- Obstfeld UC버클리대 교수는 결국 트럼프 관심이 약달러로 옮겨가면서 교역국에 환율 절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
- 그러나, 수출 촉진을 위한 약달러 기조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화 위상 유지 간의 모순 예상
- 막대한 재정적자와 물가 불안 문제도 인위적 달러 약세의 제약요인

✓ 미국이 1980년대 중반의 Plaza Accord와 같은 환율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나, 합의 가능성이 낮은 편

- 중국은 환율절상 압력을 미국의 경제강압 수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
- 과거와 달리 전세계 민간 부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매우 큼

✓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로 환율 압박을 무역불균형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

- 미중 간 협의에 따라 중국이 속도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가능성도 존재

관세부과의 효과 ②: 무역불균형 완화 vs 재정수입 확대

✓ 관세인상에 동반된 달러화 평가절상은 관세부과에 따른 물가 인상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

- 만약 관세인상분과 동일한 규모로 달러화가 상승하면 물가변동이 미미할 가능성 (“Currency Offset”)
- 이 경우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교역 상대국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관세 부담을 지는 상황
-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 없이 관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, 달러화 강세로 무역적자 오히려 상승 가능

관세부과의 효과

	Perfect Currency offset	No Currency Offset
물가	물가 안정	물가 상승
관세 부담	무역 상대국	미국 소비자/생산자
무역수지	무역수지에의 영향 미미	미 무역적자 축소
관세 수입	상대적으로 큰 관세수입 증가	상대적으로 적은 관세수입 증가

자료: Miran (2024)

관세부과의 효과 ③: 감세 vs 관세수입

- ✓ 관세인상을 통한 충분한 감세 대체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
  - 감세 등에 따른 재정소요는 향후 10년 간 4.6~11조불 수준으로 추정
  - 현재 연방 세수 총액 4.44조 달러 중 관세는 약 2%, 개인 소득세는 연방 세수 총액의 49% 차지
- ✓ 그럼에도 불구하고, 트럼프는 관세를 주요한 재정지출 대응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지속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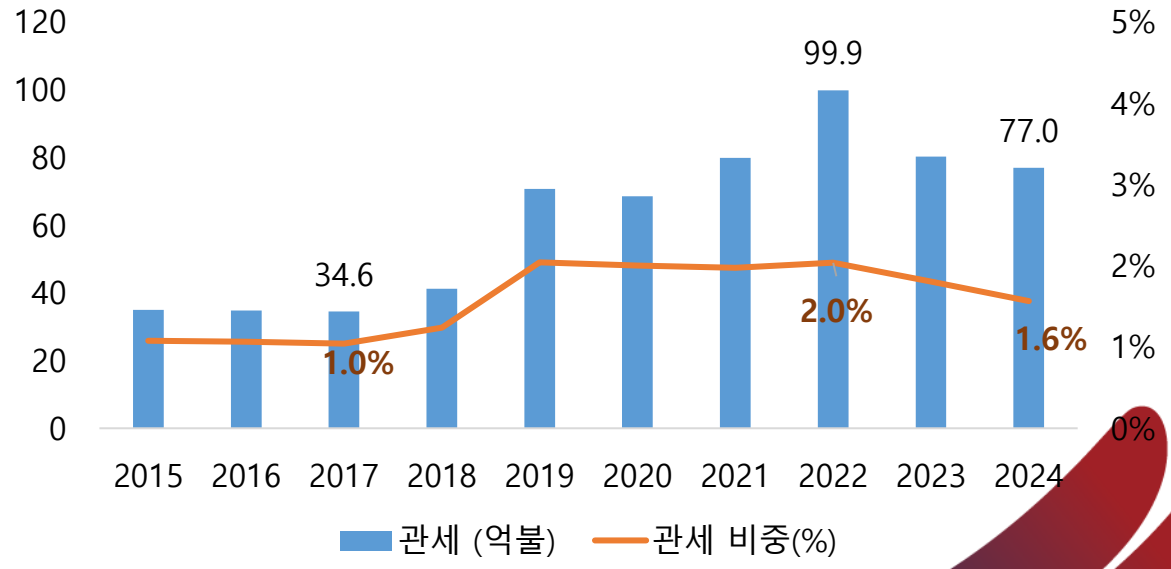
트럼프 공약의 재정적자 영향

(단위: 십억 달러)

재정적자 확대: 지출 증가, 세입 감소 관련		재정적자 감소: 지출 감소, 세입 증가 관련	
정책	증감	정책	증감
TCJA 개정 및 연장	-5,350	보편관세 등 도입	2,700
시간외 근무 수당 면세	-2,000	에너지, 환경정책 환원 및 생산 확대	700
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종료	-1,300	낭비, 사기 및 오용 감축	100
미국 내 제조기업 대상 법인세를 15%로 인하	-200	교육부 철폐 및 학교 선택 지원	200
팁에 대한 면세	-300	**합계: 재정적자 감소 측면**	3,700
군대 현대화 및 강화	-400		
국경 보안 강화 및 불법이민자 추방	-350		
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 혜택 및 주택 공급 개혁	-150		
헬스케어 지원, 장기요양 및 돌봄 지원 강화	-150		
합계: 재정적자 확대 측면	-10,200		
이자비용	-1,000		
합계: 재정적자에 대한 순 효과	-7,500		

자료: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(2024) "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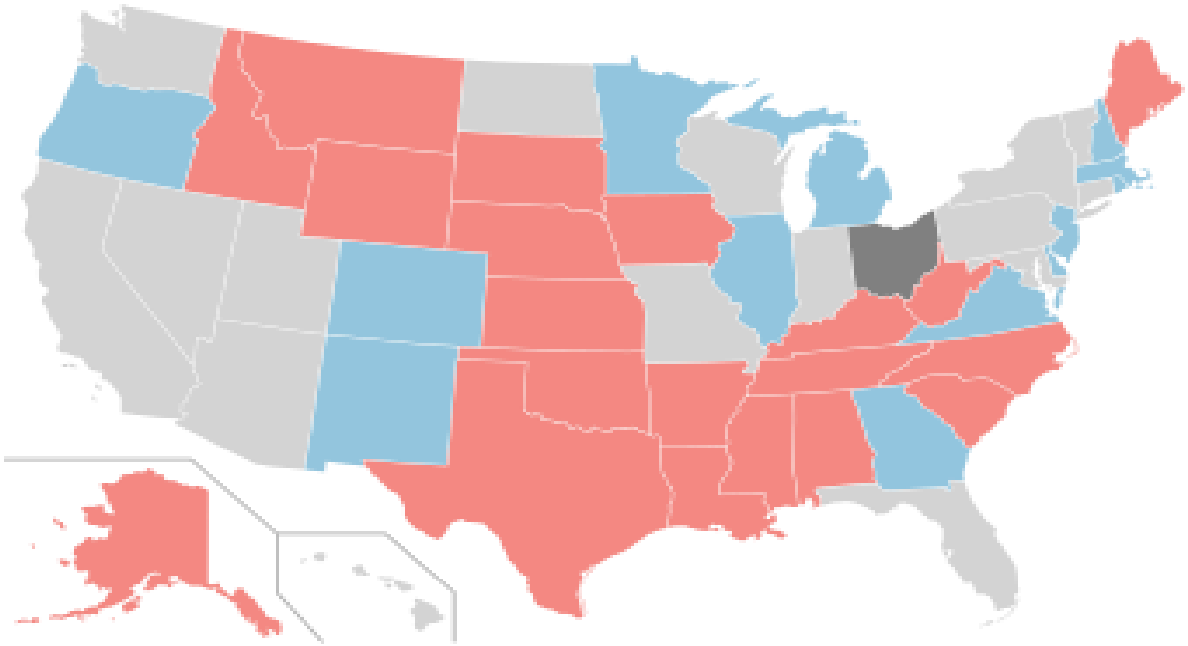
미국 관세수입 최근 추이



2026년 중간선거가 미 통상정책의 1차 분수령

- ✓ Uncle Joe"Cannon" hypothesis
  - 역사적으로 관세율을 크게 조정하는 정부는 다음 의회 선거에서 크게 패하는 경향 (Clarke, A.J. et al.; 2016)
- ✓ 2026년 미 의회 중간선거가 트럼프 통상정책 성패의 일차 분수령이 될 가능성
  - 현재 상당수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방어해야 지역(20:13) 이라는 점이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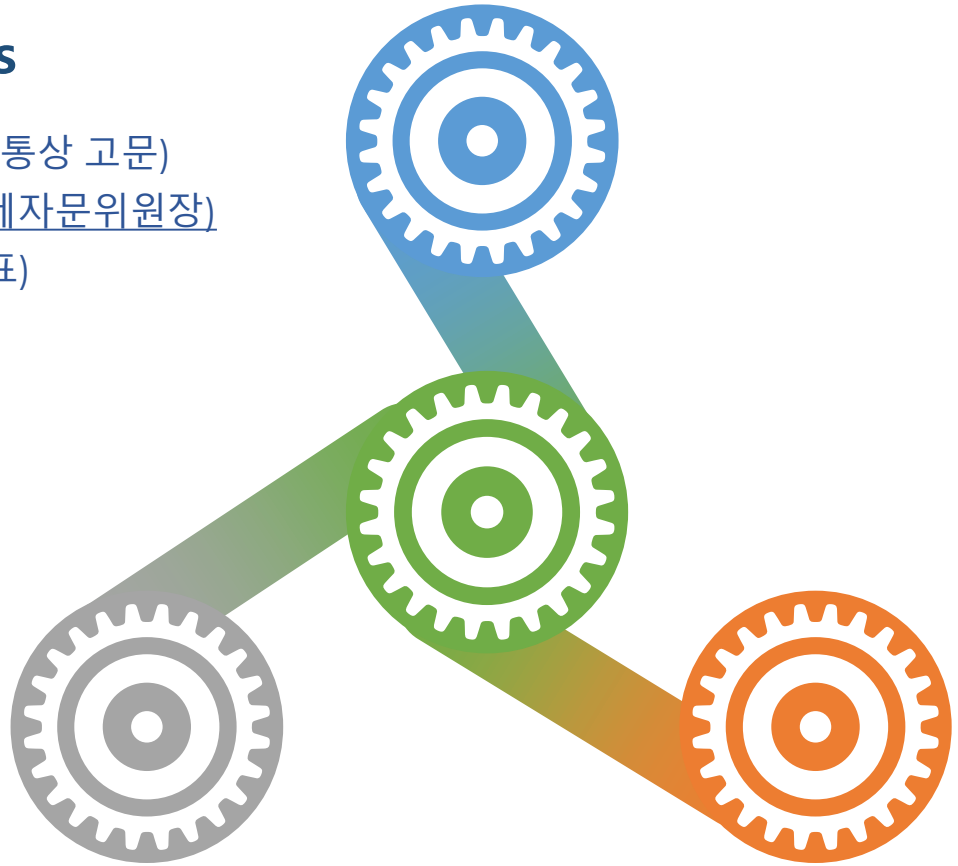
2026년 미 상원 중간선거 대상지역



트럼프 경제정책 주요 Players

Mercantilists

- ✓ Peter Navarro (백악관 무역통상 고문)
- ✓ Stephen Miran (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)
- ✓ Jamieson Greer (USTR 대표)



Security Hawks

- ✓ Marco Rubio (국무부 장관)
- ✓ Mike Waltz (국가안보보좌관)
- ✓ Eldridge Colby (국방부 정책차관)

Tycoons

- ✓ Howard Lutnick (상무부 장관)
- ✓ Scott Bessent (재무부 장관)
- ✓ Elon Musk (DOGE 장관)

3. 도전요인과 시사점

트럼프발 통상분야 주요 도전요인

✓ 취임 직후 발표한 “미국 우선 통상정책(America First Trade Policy)” 각서나 이후의 관세조치 등을 고려해 볼 때, 다음과 같은 제반 도전요인이 발생할 가능성

- 관세인상: 철강, 알루미늄, 자동차 및 부품 (발효, 232조), 반도체, 제약, 구리 등 (부과 예고, 232조), 상호관세 등
-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강화
- 수출통제 및 직접투자 통제
- 환율 압박
- 대중 견제 (간접 수출 포함)

[참고] America First Trade Policy

의제	주요 조치
불공정·불균형 무역 해소	·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과 영향 분석 · 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·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및 시정 권고 · USMCA 개정 협의절차 개시 · 환율조작국 식별 및 대응조치 마련 · 기존 무역협정 개정 검토, 잠재 무역협정 발굴 ·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법률의 적용 정책 및 규정 재검토 · 위조품 및 밀수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 수입 손실과 위험 평가 · 미국 시민·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차별적 또는 역외 세금 부과 여부 조사 · WTO 정부조달협정 재검토
대중 경제·무역 관계	· 미중간 경제·무역 협정 검토 및 관세 등 필요 조치 시행 권고 ·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지난 4년 간의 이행 검토 및 시정조치 시행 권고 · 불합리· 차별적이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·제한할 수 있는 중국의 행위, 정책 및 관행 조사 및 대응조치 마련 ·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대한 법적 재검토 · 중국인에게 부여된 특허, 저작권, 상표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현황 평가
기타 경제안보 조치	·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조정 조사 타당성 평가 ·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예외, 면제 및 기타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검토 및 평가 · 미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재검토 ·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국제거래 통제 확대 여부 검토 · 안보기술 및 우려 국가 관련 해외투자 보안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수정안 검토 · 외국 보조금 정책이 미 연방조달시스템에 미치는 왜곡 평가 및 관련 법적 근거 마련 · 캐나다, 멕시코, 중국 등에서의 불법 이주 및 펜타닐 유입 평가 및 조치 권고

시사점 ①: 산업 대변혁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

✓ 지난 수십년 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온 우리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충분한 경쟁력 우위나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중국 등 후발 기업들의 기술에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는 소위 **"혁신가의 딜레마"**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

-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1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었고, 공급망 의존구조도 이미 역전
-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한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
- 앞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생산·수출전략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은 어려울 전망

✓ 공급망 불안, 자국 우선주의 등에 따라 온쇼링, 니어쇼링 압력 가중과 이에 따른 미국 등 현지투자 증가가 늘어나면서 **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분업구조 약화** 가능성

✓ 따라서, 중장기적 시각에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기술 기회 포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·시행 필요

시사점 ②: 대외경제정책의 방향

✓ 향후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의 전반적 성숙화로 인해 국내 소비나 투자 둔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대외부문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성장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

- 특히, 디지털 전환, 패권경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상품 수출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, 서비스 수출, 대내외 직접투자, 인력이동, 기술교류 등 다면적 대외경제전략의 재정립이 매우 중요
-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“혁신성”, “개방성”, “포용성

✓ 단기적으로는 미·중 패권경쟁 등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

✓ 중장기적 시각에서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무역, 투자, 인력이동, 지식교류 등 통상정책 전반의 대외개방성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기반 마련

시사점 ③: 협력 및 사업기회의 저변 확대

- ✓ 최근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조되는 국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,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(like minded country) 간 협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독일, 일본, 대만 등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(like positioned country)와의 민관협력체제 강화임
- ✓ 이에 더하여 글로벌 공급망 가교국가(connector country)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, 동남아,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,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자원 보유국들과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
  - 미·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
- ✓ 특히,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의 수출 다변화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**현지화 전략** 시행이 매우 중요
  - 가령, 인도의 경우 자연친화제품 선호, 현지 진출기업의 인도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

시사점 ④: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 재고

✓ 미·중 패권경쟁은 중장기적으로 상호압박 → 비용상승 → 위기고조 → 타협 순으로 진전

- 중국 성장세 하락으로 경제·군사적 격차가 지속될 전망이나, 내수시장 규모의 우위성, 전략 자원 부존도, 빠른 기술발전 등 고려 시 중국 영향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

✓ 미·소 냉전기와 비교 시, 지경학적 양극성(bipolarity), 중국·소연방의 일당독재형 정치구조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나, 경제적 초연결성, 중국형 사회주의의 대외 파급력 미흡, 우호적 전략동맹 네트워크 미흡 등에서 커다란 차이점 존재

- 따라서, 미·소 냉전의 이분법적 진영논리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, 다양한 국가와 세력 간 경쟁, 갈등, 협력의 복합적 합종연횡이 지속될 전망

✓ 미국과 중국을 중심국과 주변국 관계,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가 아닌, 글로벌 외교와 경제의 두 개 중심 국가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

- 미국과는 동맹에 기반을 둔 국가 안보와 기술 안보 측면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,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경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

감사합니다